

선거뉴스談論의 현실 질서 구성

—광역의회선거에 관한 텔레비전 보도 분석—

姜 明 求 · 金 秀 貞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서울대 신문학과 박사과정

目 次

- | | |
|------------------------------------|--------------------|
| 1. 머릿말 | 정당 |
| 2. 언론의제와 행정부 의제의 일치
선거목표로서의 공명성 | 4. 현실정당화를 위한 공명성 대 |
| 3. 공명성의 관점에서 표상된 정부와 | 5. 결 론 |
| | 참고문헌 및 부록 |

1. 머릿 말

지방자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민자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승리하고 패배한 당사자나 국민 모두에게 뜻밖의 결과였다. 민자당은 지난 3월 기초의회 선거에서 전체 260개 시·군·구 의회 가운데 190개 의회(73.1%)를 차지했으며, 광역의회에서는 전체 866개 의석 중 564석(65.1%)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신민당은 광역의회에서 165석(19.1%)을, 민주당은 21석(2.4%)을 얻는데 그쳤다. 득표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자당이 전체 투표의 40.6%, 신민당이 21.9%, 민주당이 14.3%를 획득함으로써 집권당에게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선거후 이루어진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들은 민자당의 압승의 근거로서 1) 야권의 분열, 2) 정치권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3) 중산층의 안정회귀, 4)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여권후보의 선호, 5) 여당의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 6) 선거법의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거에서의 승리에 힘입어 집권당은 앞으로도 선거를 지배질서형성과 정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의회선거 등이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질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들 선거는 지배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진정한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 선거는 국민들에 의해 민주적 정치참여의 장으로 지지받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선거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식행위로서가 아니라, 대다수 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위한 정치과정으로 자리잡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의문들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언론보도가 선거를 한국사회 정치과정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은 사회적 권력관계가 담론 ‘안에서’ 그리고 담론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진제에 서있다 (Faucault, 1971 Dijk, 1988). 즉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권력은 물리적, 물질적 힘의 직접적 행사를 통해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대중들의 정보, 지식, 인식에 대한 통제는 상징적 차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뉴스담론은 특정한 정치현실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수용가능한 의미로 구성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이를 생산하는 기구나 주체가 현실의 제반 제도와 맺는 관련성으로 인해, 권력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역의회 선거에 대한 뉴스담론의 분석은 단순히 뉴스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이라는 맥락속에서 뉴스가 어떻게 대중들의 정치적 신념, 의식, 인식 체계의 유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뉴스가 어떻게 선거를 정치과정에 위치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거에 대한 뉴스담론과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언론보도가 대중들에게 요구되는 정치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판단력,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무감각, 정치적 냉소주의, 정치적 인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1991년 6월 1일 부터 6월 22일까지 23일간 KBS 1TV ‘9시 뉴스’와 MBC TV ‘뉴스 데스크’에서 방영된 광역의회 의원선거관련 보도이다.

뉴스담론이 어떠한 의미로 광역선거를 정치과정속에 위치시키고 현실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거관련 보도담론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선택되고 배제되었는가를 내용분석¹⁾을 통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선택과 배제의 방식과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2. 언론의제와 행정부 의제의 일치 : 선거목표로서의 공명성

2-1.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면 이번선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선거과정에 있어서 공명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문제이지 선

1) 분석대상이 되는 전체 212건의 아이템을 동질성이 큰 5개조의 코더들(2인 1조)이 20개의 항목을 코딩함으로써 이루어졌다(종합적 신뢰도 측정에서 0.99의 신뢰도 계수가 나왔다). 분석은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 15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시청자 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거 목적 혹은 선거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부록 <표 1>에서 보듯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다루어진 뉴스 총 212건을 주제별로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보도가 40건(18.9%)으로 정당관련 보도 다음으로 많았다. 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명선거에 포함되는 범주인 선거사건 20건(9.4%)을 합하면 공명선거보도는 총 60건에 이른다. 공명선거를 주제로한 보도양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서도 ‘공명선거를 치루는 것이 곧 선거에 승리하는 길이다’(6월 2일 MBC)라는 식의 논조가 반복되는 가 하면 불법, 타락 과열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일반유권자들로 하여금 공명선거만 되면 이번선거의 모든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뉴스의 의제설정의 기능의 측면에서 볼때 ‘행정부의 의제’와 ‘언론의 의제’가 대단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부가 바라보는 선거라는 정치현실의 규정은 대중들에게 활발한 논의나 토론, 논쟁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이 규정한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이는 선거에 있어 행정권력의 가장 큰 과제가 선거의 관련개입이 없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유권자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활발한 정치토론 보다는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효율적’이란 용어가 바로 공명선거라는 상징어의 핵심적 내포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유권자들이 광역의회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토론의 장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선거의 성패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말쑥없이 적당히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의제가 행정부의 의제와 일치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결과를 지닐 수 있다. 첫째, 언론이 선거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이나 기준, 보도 전략을 지니지 못하고, 단순히 정부의 의제를 수용하여 따라갈때 언론은 정부의 캠페인 창구에 다름 아니게 된다. 언론자신이 ‘공명성이야말로 광역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자목표’라고 독자적으로 선택했다고 쳐도, 이후 분석에서 보여지듯 공명성에 관한 보도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의 각도와 별반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명선거’라는 정치적 상징어는 청와대, 검찰, 경찰, 선거 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당과 시민단체들에 의해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다. 언론 역시 공명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거의 모든 주체들이 공명선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도 광역선거가 타락하지 않고, 돈 쓰지 않고, 관련개입 없이 공정하게 치루어지리라고 믿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은 공명선거에 요구되는 정당의 합리적 개혁 및 선거법과 선거 자금법 등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추상화된 구호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다시 말해 선거과정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외면한 채, 언론이 공명선거라는 캠페인에 집착할 때 공명선거라는 정치적 상징어는 허구화 된다는 것이다(이점은 다음 절의 선거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2. 공명선거를 뒤받침할 만한 선거법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이번 선거가 불법, 타락으로 일관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하면서도 공명선거를 위한 법제적 장치인 선거법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선거법이란 광역의회의원 선거법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정당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관한 법률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특히 공명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도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구로서 행정·입법·사법으로부터 독립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와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는 주변적 행정기구의 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타락의 현장을 선관위가 적발했을 경우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사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적 역할밖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가 취약한 권한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면서 전국적 수사망과 인원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는 선관위의 고발만을 기다릴 때 불법·타락 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행정부 수장의 ‘엄중한 경고’나 캠페인은 현실호도의 상징에 다름아니게 된다.

이처럼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한 구조적 조건에 대한 심층보도의 부재외에도 광역의회 선거법이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과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가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한 후보는 낙선시키자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선거사무원이 아닌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시민운동단체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선거법의 문제를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과의 관련하여 보도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실보도에 머물렀다.

광역의회의원선거법에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억압하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치 못한 양상이 드러나는 사실보도에만 집착하였을 뿐 선거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거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담론의 두가지 측면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선거라는 정치적 제도가 선거 관련 법률이라는 법률적 담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법률적 담론은 명령, 위협, 지시, 물리적 제재 등을 통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을 행사한다. 공명선거 실천협의회는 부정선거 행위 고발이 원론적 의미의 의회민주주의 원칙에서 볼때 가장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이 선거법 위반을 위반하는 것으로 입건될때 언론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뉴스가 이러한 선거법의 문제를 심

충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법률이 갖는 직접적 통제력에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법률의 개정
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TV뉴스는 입건된 사실만을 단신으로 보도하고 있다.

두번째 측면은 선거법의 문제가 TV보도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명
선거가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선
거법의 문제는 중요한 뉴스로 선택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정치권력의 의제와 언론
의제는 상당히 일치하면서, 동시에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되는 이슈는 감추어질 때, 선거
라는 제도적 장치는 민주적 정치질서에 기여하기 보다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한 형식적 질
차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2-3. 관권이 개입한 사례들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사례중에 관권개입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권개입으로 인한
구속사태는 한 건도 없었고, 텔레비전 뉴스보도에 있어서도 관권개입 사례보도가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선거기간중 관권개입 사례는 공명선거실천협회의 발표에만 의존해 보더라
도 공무원 특정후보 지지가 8건, 통반장 선거운동 지지가 14건, 반상회를 통한 선거운동
1건 등 총 23건이나 되었다. 이 고발 건수를 제쳐 두고라도 신문에 크게 보도한 기사만 볼
때 ‘경기도 미금시가 선거기간 중에는 민방위 훈련을 소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여 민자당 김영권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것’(6월 11일 동아, 6월 12일
한겨레)과 ‘강원도청이 광역의원 입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산한 22개 시군에 각 선거구별
로 후보자들이 득표전망 등을 보고 하도록 한것’(6월 13일 한겨레)은 너무도 분명한 관권
개입임에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았다. 뉴스가 유권자가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락이라고 비난하면서 관권이 개입한 경우에 추적보도를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실 보도까지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관권개입에 관한 표현이 뉴스에 나
온 것은 행정부나 선관위의 지시사항에만 해당되었고 내용상 관권개입이 분명한 사실에 있
어서도 금품, 향응으로 보도하여 관권개입을 희석시키고 있다. KBS 6월 12일 앵커멘트에서
“내무부는 일부 통장과 반장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
적에 따라서 특정후보자를 위한 모임이나, 향응을 앞선하는 통장이나 반장은 즉시 해임하
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명백한 관권개입 사례가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될 경우 타락, 불법선거라는 일반
적 사례로 호도되거나, 대치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누락, 외면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대치하는 현실구성행위의 효과는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현실인식의 포기일
수 있는 것이다. “다 도둑놈들,” “그놈이 그놈이지”라는 언술들은 이러한 인식의 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현실구성행위(뉴스의 선택과 배제)와 관련해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현실인식의 포기가 현실의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의 누락과 외면 그리고 호도와 대체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2-4. 공명선거를 다룬 보도가 많았음에도 정작 공명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적었다

TV 뉴스의 공명선거에 관한 보도는 혼탁, 과열 양상만을 비추었을 뿐 어떠한 대안 제시도 보이지 않았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행 선거법 아래서 공명한 선거가 힘들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대안적 제시로 적절한 질차를 거친 ‘발로 뛰는 후보자’의 모습을 발굴 취재해 봄직하다. 물론 광역의회 선거에서 전국의 후보자들을 전부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몇건 안되는 화제의 후보자가 소개된 경우에도 흥미위주의 인물을 선정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후 보도에서 화제의 당선자로 부각된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 당선자’,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당선된 ‘전화위복 당선자’, 영호남 지역에서 각기 일석 썩을 얻은 신민, 민자의 당선자, ‘육중 당선자’ 등이었다. 그러나 민중당의 유일한 당선자로서 광산지역에서 뽑힌 지역사회 일꾼은 기사에서 선택되고 있지 않으며, 언론이 흔히 강조하던 주택, 환경, 교육, 조세 전문가 등의 전문직 후보들이 왜 대거 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유권자)에게 선거의 결과를 흥미위주로 파악하게 하고, 선거의 결과가 국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분석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5. 정치참여의 장으로서 광역의회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와 기능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중들이 경제 정치적 현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와 기능의 분화에 대한 지식의 획득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현실변화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균등하게 분배되기 보다는 관료 지식인 등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중들은 경제, 행정, 사법, 기술, 과학, 환경 등 많은 기능적 지식과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공적 기구와 지식엘리트 집단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집단과 대중사이의 지식과 정보의 불균등 분배와 격차를 메꾸어줄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언론이다.

지방자치 선거는 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중단된 이후 30년만에 부활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통과를 전후해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보도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광역의회 선거보도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보

정보 없음	189건 (89.1%)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선거절차	12건 (5.7%)
지방의회의 조직과 역할	6건 (2.8%)
지방의회의원의 자격과 자질	2건 (0.9%)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역할과 관련성	1건 (0.5%)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무	1건 (0.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	0건
기 타	1건 (0.5%)
합 계	212건 (100%)

보와 지식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표를 보면 광역의회 선거관련 뉴스에서 지자체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총 분석대상에서 89.1%나 된다. 그리고 제시된 정보(11%)에서도 대부분 선거법과 절차와 같은 선거과정에 관한 것일 뿐(5.7%)이고, 보다 기본적인 지방의회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정보는 단지 2.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거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총 212건에서 단지 1건(0.5%)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정당과 공명선거에 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반하여 정보적 측면의 보도는 매우 적었다. 지방자치제를 위한 두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누차 강조된 것에 비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무엇때문에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가능한지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방행정부서의 장을 직접 선출한다는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시장, 도지사와 장관이 임명하는 시장, 군수 등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광역의회 선거가 끝난 뒤에도(물론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추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살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투표행위의 결과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따져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앞서 말한 정당중심의 보도태도와 함께 유권자의 정치적 냉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²⁾ 이와 같은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

2) 뉴스이외의 다른 보도 프로그램중 이러한 정보적 측면을 보충해 줄 수 있었던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KBS 6월 10일, 11일 집중기획과 6월 22일 심야토론이 있었는데 22일 심야토론은 선거후에 방영됨으로써 선거전 유권자의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기획 프로그램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것과 방영시점을 맞추지 못한 것은 선거방송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부재에 대한 언술들은 금권타락선거, 정당개입에 의해 타락된 선거라는 언술들과 함께 정치적 냉소와 허무주의라는 대중들의 정치인식을 구성하는 기초적 담론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공명성의 관점에서 표상된 정부와 정당

3-1. 정부가 공명선거의 주체로서 제시되었다

뉴스주체에 관한 선거관련 보도 분석에서 행정부(검찰, 경찰, 선관위, 행정부) 관련사항이 전체 212건의 기사 가운데 40건으로서 18.8% (40건)로 나타났다(부록, 표 1). 또한 화면상 주요인물로서도 행정부(행정부, 대통령, 선관위)는 전체 기사중 25.9%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표 9). 이것은 뉴스에서 행정부가 주요한 정치행위자로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그렇다면 뉴스에 등장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뉴스 주제에 따른 기사 보도 초점의 분석(부록, 표 3)을 보면, 정부는 공명선거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서도 단지 선거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에만 관련되고 있다. 또한 공명선거의 주체를 알아본 분석표(부록, 표 5)에서도 정부는 공명선거의 집행자로서 가장 높은 비율(28.8%)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끄는 수호자임을 표방하는 것이다(부록, 표 4).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제로 앞으로의 총선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일부 드러내고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표상은 현재의 권력구도의 현실체로서 정부의 성격은 사라지고 오로지 중립적이고 비당파적 조정자이며,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서만 부각되게 된다. 이것은 유권자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실제 선거에서 권력의 개입 등의 선거 부정을 축소시켜 바라보게 만들고, 동시에 정부와는 무관한 일탈적 행위로서 파악하도록 작용한다. 또한 여당의 총수가 대통령이라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모든 정치 전략이나 선거 활동에서 무관한, 오로지 국가활동의 수반으로서만 표상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치 권력의 성격은 은폐되고, 정부의 부정선거 사례 또한 정부 말단의 비구조적인 지엽적 문제로 축소되는 것이다.

다음은 전체 뉴스의 양적인 분석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뉴스의 담론 안에 이러한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점화, 범주화, 상징어의 개념들이 사용되었다.³⁾

3) 초점화(focusing)는 뉴스담론이 사건을 어떠한 측면을 쟁점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고 틀짓는 방식이다. 사건의 특정 측면이 강조 부각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이 달리 해석될 수 있게 된다. 범주화(categorizing)는 특정 사건들을 특정 맥락으로 구분짓거나 또는 통합하므로써, 그 사건들의 성격이나 본질적인 차이를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는 기술이다. 상징어(symbol)는 여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6/1: “정부는 내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일련의 집회와 시위개최는 선거 분위기를 파열시키고 자칫 무질서와 혼탁한 선거양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고...사회안정과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6/4: “중앙선관위는...불법선거운동에 대해...엄중경고”

6/7: “중앙선관위는...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확증거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6/9: “중앙선관위는...불법타락 단속 독려반을 파견...고발조처...일부 재야단체 등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6/17: “중앙 선관위원장은...불법, 과열, 타락으로 치달고 있어서...모든 선거사범을 엄중히 다스리기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감...”

초점화: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부는 선거에 대해 무질서와 혼탁한 선거양상을 우려하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갖는 민주정치에서의 의미, 요구되는 정치권과 국민의 자세 당부 등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미 선거시 동반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만이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선거에 대해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초점제공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디어가 이를 그대로 반영한듯이 선택, 강조한 초점제공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요소로서 선거 초점제공(혼탁, 타락, 무질서)은, 수용자(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시각을 선거의 목적이거나 본질보다도 그 양상에 대해서만 고정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전체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에 관한 단편적인 이해를 유도하며, 오로지 적법인가 불법인가만을 주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상징어: 정부와 선관위가 사용하는 언어는 관료적인 언어이다. ‘자체’ ‘단호히 대처’ ‘정확증거’ ‘고발조처’ ‘증거수집’ ‘비상체제’ 등등의 언어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관료적 언어로서 사실이나 사상, 지침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전반적으로 의미없는 것이기 쉽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료적 말투가 사용되는 것은 Edelman(1971)의 말처럼, 공적 기구로서 지위를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특정 조직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다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6/15: “법무장관은 선거법 위반자를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엄히 단속하고...공명선거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 “이에 따라 검찰은...불법 선거를 한...를 구속”

범주화: 선거법 위반자는 위반한 선거법의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될 수 있으며, 더 크게는 선거가 전체 정치, 사회과정에서 차지하는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서 은유나 적유와 같은 수사법 뿐 아니라, 특정사건을 형상화시키는 언어형태 모두를 포괄한다. 언어형태는 공유된 의미, 지각, 확신을 창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적 상징어는 선택된 이해를 강화하고 다른 이해들은 무시하게 만들며, 가치적인 전체들을 만들어 내므로, 정치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함축적 은유들은 명백한 행위규범을 만들어 낸다(Edelman, 1971). 따라서 이러한 정치 담론에서 상징어의 사용은 정치현실을 특정방식으로 이해시키는 중요한 기술이 되는 것이다.

고, 살인, 폭력, 민생치안 파괴 등의 범죄와의 전쟁과 그 차원을 동일화시켜, 단일범주로 묶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의 위반을 정치과정이나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모호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 표명에 뒤이어, 검찰의 불법선거자구속의 실행력을 나타내 보이므로써, 이미 정부의 표명이 아니어도 있어야 했을 행위를 신속하고 실천력 있는 행정력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미디어는 기사 내용의 초점화, 범주화 그리고 언어를 통해 법적 질서자수호자로서 정부를 표상하고 있다.

3-2. 정당과 정당대결은 공명선거를 파괴하는 주체로 제시되어졌다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간의 뉴스보도에서 정당의 선거 전략, 지침, 대응은 전체 기사내용 중 23.1%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당관련사항이 뉴스의 주체로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2). 또한 화면상 주요인물로서도 가장 높은 비율(29.2%)을 보여주고 있어서(부록, 표 9), 정당이 행정부와 함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당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는 기사보도 초점분석(부록, 표 2)을 보면, 정당간의 경합 또는 대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러한 표상의 비중을 미디어가 선거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나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광역의회에서 정당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정보나 해석은 부재하고 오로지 정당대결로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위한 선거에서 오로지 중앙정치의 권력구도에서만 파악하려는 이러한 정당 대결 중심적 보도는 미디어의 보도, 제작 관행의 부분적 결과로서 볼 수 있다. 엘리트 중심적인 보도 관행은 정치 엘리트들이 활동하는 공적 영역으로서 정당에 치중하게 하고, 이는 정당보도가 총재 및 당직자 중심의 인물화 경향을 드러내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대결적 보도는 뉴스의 기치를, 경마(horse-race)와 같이 흥미있는 요소와 극적인 요소에서 찾으려는 관행에서도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선거캠페인 뉴스보도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Joslyn, 1990; Davis, 1990)들은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도 양태가 경마식 보도 같이 표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거 보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자들은 선거를 흥미있는 게임과 같이 보도하므로써 '누가 앞서고 누가 지지를 얻는가, 전략은 무엇인가' 가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정당의 경합을 정책이나 공약의 경합이 아니라 선거운동이나 전략 행위의 경합으로 보도하는데 치중하게 한다. 즉 '정책 이슈'가 아니라 단지 '캠페인 이슈 또는 선거 전략 이슈'만의 경합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경험과 정치구도의 변화 등에 미칠 현실적인 선거 결과로 부터 관심을 돌려버리게 만든다. 더구나 이러한 경마식 보도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는 미묘하게 '불법과 타락'의 주제와

맞물려 더욱 선거의 현실적인 중요성이나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광역의회 선거는 다분히 그동안의 6공화국과 지배적인 정치 집단의 정치행위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과정의 정당 비리와 결합하여 정당의 경험적 선거운동보도는 ‘누가 얼마큼 더 불법·타락 선거를 자행했는가’라는 부정적 정보만을 제시하므로써 중간평가로서 광역의회 선거의 중요성을 사상시켜 버렸다. 따라서 광역의회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맥락속에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보도의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정당경합, 또는 대결이 어떻게 의미지워지는가 이다. 구체적으로 뉴스담론을 보자.

6/1: “신민당은 오늘도 부산에서 옥의집회를 열어서 바람몰이를 계속했습니다” “민자당은 60% 확보를 목표…안정에 호소…신민당은 호남을 석권할 목표…중부권의 녹색바람…민주당은 도덕성과 개혁을 부각하려는 전략…”

“중앙선관위장은 정당활동을 빙자한 위법, 탈법 선거운동을 용납 불가…” “등록후보의 90%가 정당추천 후보…광역의회 선거가 여야대결의 장임을 실감…등록순서를 놓고 후보들이 신경전을 나타내 파열선거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6/2: “뜨거운 선거운동…파열 선거분위기”

6/5: “각 정당의 공명선거 의침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 “파열과 타락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6/11: 파열선거를 정당이 부추기고 있음이 분명한…”

“여야 각 정당들도 일제히 공명선거를 외치고…”

6/12: “이번 선거가 타락과 불법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은 정당들의 노골적인 개입과 정당간의 대결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입니다.”

“정당들이 서로 혼탁해지고 파열된 틈을 상대방에 넓히고 있습니다.”

“불법 타락 선거의 반장—통장집에서 음식 대접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반장들의 노트발견”

6/18: “마지막 단계에서 혼탁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야당 수뇌부가 모두 나선 득표지원 활동으로 전국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수사(rhetoric)들 속에서 정당의 대결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의 공명성을 저해하고, 불법과 타락의 선거양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정당의 대결이 저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사들은 현실의 반응을 넘어서서 특정의 사실을 무시하고 감추며 동시에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초점화: 뉴스 보도는 정당의 선거의 참여를 부정적인 대결로서 초점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민주정치에서 필수적인 존재로서 정당의 위상을 감추고, 동시에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유권자)의 합리적인 인식을 방해한다. 또한 정당의 대결은 민주정치과정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므로써, 유권자에게 이미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지역감정과 연관되어진 부정적인 정당인식을 상기시키게 만들고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연장시키게 만든다.

범주화 : 금품 및 향응제공, 흑색선전 등의 선거법 위반 내용은 옥외집회나 선거벽보 부착의 규정위반과 그 위반의 성격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옥외집회 등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이 극히 제한된 선거법의 문제를 드러내는 일면이기도 하므로, 일회적 선거행사가 아니라면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단순하게 금품 및 향응제공과 같은 선거법 위반과 동일 범주로 처리되어 무조건적으로 ‘불법, 타락’으로 표현되어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6/11일 동아, 6/12일 한겨레) 등 관이 개입한 부정사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서 통·민장 선거개입 사실을 관권의 개입으로서 보도하지 않고 단지 금품, 향응의 선거법 위반 또는 타락선거로만 범주화시켜 보도하므로써 관권개입의 문제를 회색시키고 있다.

상징어 : ‘공염불’ ‘타를 상대방에 넘기고…’ 등의 수사는 정당이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모두 허위적이고 제스츄어일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타락의 원인을 보다 역사적인 맥락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에서 또는 정치 문화의 유산에서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은 무시되어 진다.

또한 ‘과열된 선거’라는 표현은 모호하게 이용되어진다. 사실 ‘뜨거운 선거’가 곧 ‘과열 선거’로서 동어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어찌보면 ‘뜨거운 선거’는 환영되어야 할 요소인 지도 모른다. 후보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유권자의 지역 후보자나 지역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강해질 수록 선거는 뜨거운 것일 수 있다. ‘썰렁한 유세장의 분위기’라는 표현이 선거에 대한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현실을 표상하는 수사(修辭)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광역의회 의원선거기간의 보도중 적극적인 참여와 열성이 혼탁한 선거양상이라는 표현과 구분되지 않고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서 등록순서에 따라 기호가 정해질 때 미리 도착해 있는 후보자들 간의 순서의 실랑이가 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열선거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표현되어지를 생각한다면, 선거보도는 처음부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틀짓기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바람’ ‘…전략’ 등의 상징어는 각 당이 선거에 임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사상된 선거 전략만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자의 ‘바람몰이’라는 상징어는 정당이나 유권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선호나 정당의 공약, 정치적 신념을 통한 선거행위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기준 아래 움직이는 행위자로서 조장되고 있다.

4. 현실 정당화를 위한 공명성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끝나고 개표의 진행 및 마감과 함께 보도된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

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현실을 미디어가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짓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선거 과정시의 보도에 못지 않게, 선거 후의 보도는 투표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새로 구성된 정치질서의 평가를 통해 국민(유권자)의 이해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전·후 모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선거 관련 뉴스담론은 앞서 이야기했던 질서 대 무질서의 대립을 역동적으로 구성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거가 시작되고 미디어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타락, 과열, 불법) 사건에 대한 언급과 우려,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 위한 선거 과정을 무질서를 낳는 분열로서 그려나갔다. 이는 상대적으로 선거전의 정치상황과 현실을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질서로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선거의 혼탁한 양상을 낳는 즉, 이러한 분열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정당과 정당 간 대결행위를 제시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분열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의 복구자로서 정부와 그 대표체로서 선관위를 주요 행위자로서 제시했다. 이처럼 누가 분열을 야기하고(정당) 누가 이를 막는가(정부)를 제시하는 속에서 담론은 유권자들에게 정치현실을 악당과 영웅의 신화적인 대립구도로 보게 한다. 그리고 시청자(유권자)들을 분열세력(정당: 악당)에 의해 야기된 무질서의 희생자로 위치지우거나 질서수호자(정부: 영웅)와 동일시 시키므로써 강한 정서적 반응을 수반하게 만든다. 또한 선거후 뉴스담론은 선거의 결과 즉, 민자당이 압승이라는 새롭게 구성된 정치현실을 새로운 질서회복으로 제시하므로써, 새 권력구조와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현실을 질서회복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선거과정의 보도와는 상반된 ‘공명선거’로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선거후 보도에서 나타난 뉴스담론을 살펴본 것이다.

6/19: “선거과정에서 금권 타락의 이야기가 많았지만 공명한 선거였다.”

6/20: “낮은 선거율로 볼 수 없지만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선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총선이나 대선보다 심리적 위계감이나 선택욕구가 낮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치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는 추세로도 볼 수 있다. 외국에서도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 지방의회 선거 투표율이 50% 내외인 것은 낮은 것은 아니다.”

6/22: “윤관 선거위원장은 오늘 이번 광역의회 선거가 비교적 평온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치러져 어느 정도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져진 것으로 평가하고...”

“광역 선거 비교적 공명 평가” “문화방송과 한국일보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가 13대 총선과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명했느냐는 질문에 더 공명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6%, 덜 공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보다 다소 높았다.”

“65%의 의석을 차지하는 민자당이 압승을 했으며, 이것은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회구를 반영하는 것.”

초점화: 광역의회 선거에 대한 평가는 선거 과정상에 불법, 타락, 혼탁한 선거라는 강조와는 달리 뉴스의 담론을 통해 ‘공명선거’로 규정되고 초점지워졌다(부록, 표 6).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공명선거로의 초점 제공은 오직 선거

결과를 공명했는가, 공명하지 못했는가의 특정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만들고, 동시에 공명하였다는 규정을 통하여 선거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이데올로기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선거 과정중의 뉴스 보도와 상반된 선거후 미디어와 선관위의 평가는 새롭게 구성된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범주화 : 58.9%의 투표율을 외국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지방자치가 정착하여 생활화된 외국에서의 투표율을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한국 사회의 지자체와 동일 차원으로 범주화 시키므로써 저조한 투표율을 왜곡된 해석으로서 정당화 시키고 있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서 ‘정치적 쟁점이 없었다’ ‘정당공천 비리 등 혐오나 불신을 주어서 선거 무관심을 초래했다’라는 원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정치적 혐오나 냉소주의의 확산에 있어서 보도의 책임은 배제시키고 있다.

상징어 : 58.9%의 투표율을 ‘정치관심의 선진국형의 추세’로 표상하므로써 낮은 투표율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65%의 의석을 차지한 민자당의 압승’의 상징어는 선거 결과 분석에 있어서 득표율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에서 배제시키고 단지 정당별 의석수에 따른 여·야의 외형적인 승패만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민자당이 65%의 의석을 차지한 것과 수도권에서 83% 의석을 차지한 것만이 강조되어 이것이 실제로 득표율 41%에 의존한 것임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다. 또한 동시에 뉴스 보도는 신민, 민주의 통합 득표율 50%가 의미하는 것도 간과시키므로써 오로지 민자당의 압승이 ‘국민들의 회구의 반영’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권력구도를 정당화 하였다.

5. 결 론

첫째로 선거뉴스 담론은 정보제공을 통한 민주정치의 교육이라는 측면과는 무관하게 나타났고, 단지, 현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송의 선거보도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과 선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 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정보는 오로지 공명성에 대한 강조, 공명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만으로 선택되어져서, 새롭게 실시되는 광역의 회선거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정보(광역선거의 의미, 역할, 투표의 기준 등등)들은 배제되게 되었다.

둘째로 공명선거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로서 선거 후보자나 유권자 대신 정부가 들어 앉음으로써, 유권자들은 방관자적인 위치로 전락하였다. 동시에 공명선거라는 주제가 불법,

타락 선거를 강조하게 하므로써 유권자들에게 냉소적이고 불신의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선거관련 뉴스담론은 주요한 행위자로서 정부와 정당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정부는 질서의 수호자로서, 정당 및 정당대결은 무질서의 원인으로써 성격지웠다. 이것은 유권자에게 정치현실을 이해하는 주요한 틀을 제공하며, 동시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수반하게 만든다. 우선, 정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정당에 대한 뉴스보도의 표상은 공명성에 대한 정부의 강조와 뚜렷하게 대조되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불법주체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질서의 회복을 강렬하게 희망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과 타락선거라는 보도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거리를 두도록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나 총선에서 강하게 부각된 지역감정이라는 부정적 담론의 경험은, 광역선거 뉴스담론에서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과 접합되어 정당의 불신, 나아가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지방자치체에 대한 불신, 민주정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 공명성에 대한 모든 권위를 정부가 독점하므로써, 이미 현실 정치 속에서 정부의 부정성을 경험한 국민에게는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대한 이중적인 괴리감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선거관련 보도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낮은 선거 참여율의 현실원인을 정당에 돌리고 있지만, TV 뉴스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고 문 헌

- Davis, D.K. (1990) "News and Politics" in D.L. Swanson and D. Nimmo(eds) (1990) *New Directions in Political Communication*, London: Sage, 147-184.
- Dijk, T.A. (1988) *News Analysi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delman, M. (1971) *Politics as Symbolic Action: Mass Arousal and Quiesc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J.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담화의 질서, 김화영 역, 「세계문학」, 1982. 서울: 민음사, 봄호.
- Joslyn, R.A. (1990) "Election Campaigns as Occasions for Civic Education" in D.L. Swanson and D. Nimmo(eds) (1990) *New Directions in Political Communication*, London: Sage, 86-122.

부 록

(표 1) 뉴스 주제

정당의 선거 전략, 지침, 대응(공명선거 제외)	49건 (23.1%)
공명선거	40건 (18.9%)
선거운동 유세	21건 (9.9%)
선거사건	20건 (9.4%)
검찰, 경찰의 활동 및 정책, 지침(공명선거 제외)	16건 (7.5%)
선거관리 위원회(공명선거 제외)	16건 (7.5%)
행정부 정책, 운영(공명선거 제외)	8건 (3.8%)
유권자 반응	2건 (0.9%)
선거 공약	0건
기 타	40건 (18.9%)
계	212건(100.0%)

(표 2) 보도초점

	선거의 적법성	정당간의 경합	후보자의 경합	선거분위기	기 타	계
빈도(%)	70(33.0)	48(22.6)	16(7.5)	12(5.7)	66(31.1)	212(100.0)

(표 3) 뉴스 주제에 따른 기사보도초점

뉴스주제	기사보도초점					계
	선거의 적법성	후보자의 경합	정당간 경합	선거분위기	기 타	
행정부 정책운동(공명선거 제외)	12	0	0	0		12 (19.0)
선거관리 위원회 활동(공명선거 제외)	2	0	0	0		2 (3.2)
정당 선거전략, 지침, 대응(공명선거 제외)	1	0	20(95.2)	0		21 (33.3)
선거운동 유세	0	10	0	0		10 (17.5)
공명선거	13	0	1	1		15 (27.0)
계	28(44.4)	10 (17.5)	21(33.2)	1 (0.2)		60(100.0)

(표 4) 공명선거의 주제

	행정부	정 당	선관위	유권자	복 합	후보자	기 타	계
빈도(%)	34(28.8)	31(26.3)	24(20.3)	9(7.6)	8(6.8)	6(5.1)	6(5.1)	118(100.0)

(표 5) 화면상 주요인물

정당 및 정당 관계자	62 (29.2)
행정부	28 (13.2)
후보자	27 (12.7)
선거관리 위원회	23 (10.8)
압력단체	5 (2.4)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4 (1.9)
유권자	4 (1.9)
전문가	1 (0.5)
제야 및 학생	0
기 타	58 (27.4)
계	212(100.0)

(표 6) 선거의 공명성 규정

선 거 후	선 거 중
<p>6/19 KBS 앵커 멘트—선거과정에서 금권타락의 이야기가 많았지만 공명한 선거였다.</p> <p>6/22 MBC 앵커 단신—윤관 선거위원장은 오늘 이번 광역의회선거가 비교적 평온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치러져 어느 정도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져진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선거법 개정을 건의했다.</p> <p>크로마키—“광역선거 비교적 공명 평가” 문화방송 한국일보 공동 미디어리서치 의뢰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가 13대 총선과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명했냐는 질문에 더 공명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6%로, 덜 공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6%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1/3 가량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p>	<p>6/5 KBS 앵커—이번 선거는 후보 공천과정에서부터 타락할 조짐이 뚜렷했다.</p> <p>6/16 앵커—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 때와는 달리 금권선거 타락선거라는 비난이 높다.</p> <p>6/21 KBS—검찰 선거사범 78명 구속</p> <p>6/11 MBC—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혼탁상이 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선거 운동의 대부분이 여야 각 정당이나 정당 추천 후보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로 부정 선거를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p> <p>6/18 MBC—광역의회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 급기야 여야 수뇌들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되고 말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국민들의 눈이 무섭다.</p> <p>6/21 MBC—검찰 수사 본격화 8백여명 입건 78명 구속</p>